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안

의안 번호	229
----------	-----

제안연월일 : 2004. 7. 20(화)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주 문

현재 출산율 저조의 문제가 향후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예측되어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중앙부처 장관, 각 당대표에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건의 함.

2. 제안이유

1980년대 중반이후 「소자녀관」의 확산으로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여 2002년 1.17명(합계출산율)으로 대체 수준 2.1명보다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 2023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급속히 감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가정의 붕괴와 사회불안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바 이의 해결을 위해 정치·경제계와 언론 등 전 국민이 동참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건의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없 음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보건복지부장관님, 여성부장관님, 5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대표님께

평소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150만 충청도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애써주시리라 기대하는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넘어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생산, 통상 등 각 분야에서 열정을 바칠 인재가 필요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생명경시와 개인 우선주의 등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출산 기피 현상은 크게는 민족의 장래에서부터 작게는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1950년대 후반부터 1961년까지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연 3%의 높은 증가를 보이며 연 4~5%의 낮은 경제 성장률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출산율을 보인 적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남아 선별출산」과 「소자녀관」의 확산으로 출산 수준이 급속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대체수준 2.1명보다 훨씬 낮은 1.17명까지 낮아졌으며, 이러한 수준은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낮은 「저 출산국」(2001년 통계 미국 2.03, 프랑스 1.90, 일본 1.33)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2023년(50,683천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출산율도 문제이지만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낮은 출산율도 이에 못잖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한 다양한 행·재정적 노력을 지금 당장 출산 증가 운동에 투입하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는 경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경제와 복지 문제 이외에 민족의 화합과 번영 등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이처럼 심각한 사회 현상임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저출산」의 문제 해결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 일부 부처와 일부 시장군수의 출산장려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전부처가 공동의 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정치·경제계, 언론, 각급 사회단체 등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저출산」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2004년 7월 20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